

정근식 “정치 아닌 학생 보호”… 현장 대응력 강화 천명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혐오시위 대응 두고 중립성 논란
학생 인권·정서 보호 최우선 강조
정신건강·학령인구 등 현안 집중
“현장 대응·제도 개선 시급” 언급
교육청, 정책 보완·신뢰 회복 예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혐오표현 시위 대응 등 교육현장의 주요 현안을 두루 점검받았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책 보완 의지를 밝혔다.

◆ ‘혐증 시위 반대 캠페인’ 공방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구로구 한중학교 앞에서 열린 ‘혐증(혐오표현) 시위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캠페인은 일부 단체가 학교 앞에서 반중(反中) 구호를 내세운 시위에 대응해, 학생 혐오와 인종차별 표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현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교육청이 나선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이 참여한 반중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해당 지역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에 달하고, 시위로 인한 학생 불안이 커 학교장들이 대

응을 요청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학생의 인권과 정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은평구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도 국정감사 도중 논란이 됐다. 간담회 당일 박 의원이 서울 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로 그날 간담회를 연 것은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박 의원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실은 당일 알지 못했다”라며 “간담회는 박 의원 지역구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전부터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청은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요청이 있으면 학부모·학생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라며 “특석고등학교 관련해서도 나경원 의원과 협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학생 정신건강 대응 실효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학생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학생의 정신건강 위기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위기개입→사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는 단순 상담을 넘어선 사회적 대응 과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 1회 회의에 그쳤고 실질적 활동이 미흡하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위원회는 내부·외부위원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 개선 중”이라며 “예방교육 강화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학령인구 감소·학군 불균형 지적

학령인구 급감과 학군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은 전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적응 대책뿐 아니라 인구 유출을 완화할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5년간 학교 통폐합 계획을 단 한 곳만 세운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과 인근 경기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맞물린 결과”라며 “현재 통폐합 계획은 1건이지만 중장기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교육감은 국감 인사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래교육, 돌봄, AI·디지털 교육, 학생 안전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과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무장애 넘어 ‘포용학교’ 만든다

전국 첫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정서·다문화 학생 환경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장애 여부, 성별, 연령,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혁신안으로, 교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포용까지 포함한 통합 설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1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5~2029년도 서울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은 기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을 넘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학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고 있는 정서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다름을 넘어 공존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물리적 편의시설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문화적 수용, 성인지 감수성 등 비

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과제는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조명·색채·소음 조절 등 심리 안정형 공간 설계 기준 마련 ▲다문화 학생을 위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및 다국어 안내체계 표준화 ▲성별에 따른 안전·편의 격차를 해소하는 성인지 공간 설계 ▲교직원·학부모 등 다양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 기준 정립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연령별 신체·인지 특성에 맞춘 설계 세부 기준 마련 등이다.

/이현진 기자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인천 개최

IMF·OECD 등 2000명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으로, 인천광역시와 국제 협력의 중심 무대로 다시 한 번 주목받는다.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경제의 재무 및 구조개혁 장관은 물론 IMF, 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한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에는 역내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며, APEC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인천플랜(Incheon Plan)’ 채택이 유력하다.

인천시는 회의 준비를 위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해 왔다. 환영만찬을 비롯해 인천 홍보관 및 기업부스 운영, 해외 대표단 대상 관광 프로그램, 수송과 의료 지원 체계 마련 등 각종 지원이 총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 설치될

인천 홍보관과 기업부스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 미래 산업 역량은 물론, 인천의 전략산업과 도시 브랜드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참가자들에게 인천의 첨단성과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관광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송도 G타워 전망대와 수상택시 체험 등을 포함한 아간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의 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도시 매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25일까지 회의장과 숙소를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인천의 료원 및 지역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 대응체계도 갖춰진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캄보디아 파견 경기 청년특사단 귀국 완료

캄폰스페우·시엠립 체류 청년 34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16일부터 진행됐던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 조치가 21일 완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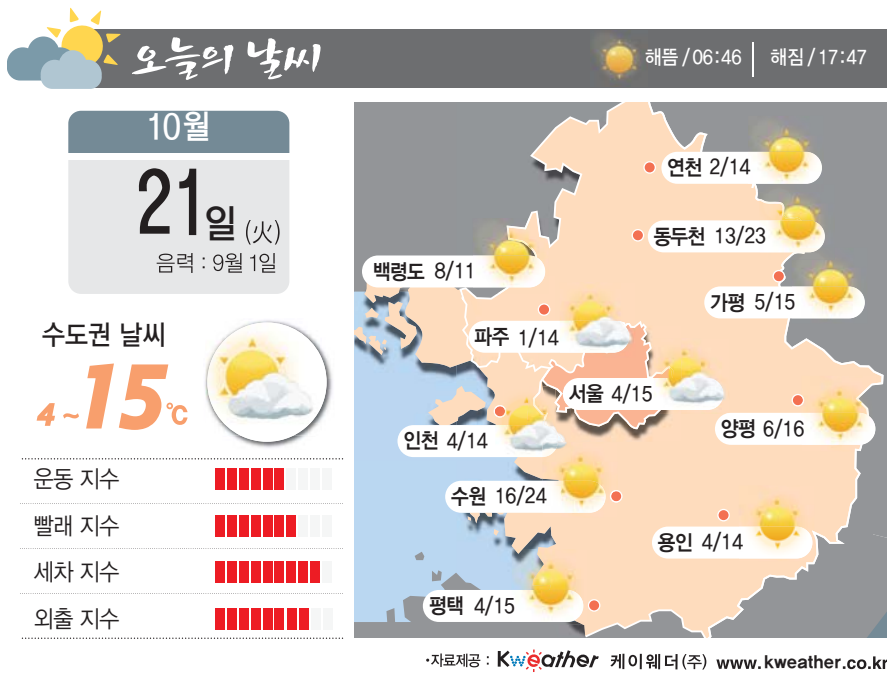
경기도는 19일 오전 기준 캄보디아 캄폰스페우 지역에 파견됐던 경기청년기후특사단 17명이 17일과 19일 아침 무사하게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밤에는 시엠립 지역 파견 단원 10명이, 20일 밤에는 같은 지역에 파견됐던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으로 21일 오전에는 이들의 귀국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 갔던 공무원 4명도 모두 단원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기후특

사단’은 총 34명(단 19세~39세)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폰스페우에 17명, 시엠립에 17명이 파견돼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현지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불가피하게 당초 18일간 계획되었던 특사단의 캄보디아 활동기간을 단축하긴 하지만 특사단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협력국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도 지시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8%…예상치 부합

▲트럼프 “한국서 시진핑과 만날 것… 별도 회담 잡아”
/사진 뉴스시스

▲홍콩서 UAE 화물기 착륙 도중 활주로 벗어나… 2명 사망

▲가자 휴전 연일 위태위태… 군사 충돌 악화로 사망자 46명

▲인도네시아 타남바르 제도에서 규모 5.1 지진 발생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4인조 괴한이 보석류 9점 훔쳐